



《노동자》권민 기자

톨게이트 노동자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 직접고용 하라



김종우 기자

9월 국회에서 노동개악 추진	성평등 수업을 경찰 수사로 넘긴 광주시교육청 규탄한다 경찰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 중단하라	계급 불평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조국 딸 의혹	국정원은 보안경찰: 또 공안 사건 조작 시도	노동자 양보 강요할 2기 경사노위도 반대해야	건설노조 토목건축 노동자 파업	한일군사협정 종료 통보와 한미동맹
3면	6면	4면	5면	2면	7면	2면

한일군사협정 종료 통보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 타협할 여지를 남겨 뒀다

이원웅

8월 22일 문재인 정부가 한일군사협정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한국군과 일본군이 기밀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이하 “지소미아”)은 중국 등을 겨냥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와 한·미·일 삼각 동맹의 핵심고리다.

당연히 미국은 문재인 정부의 결정에 곧바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지소미아 폐기를 주장해 온 좌파·진보 진영 일부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문재인 정부를 독려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아직 지소미아는 끝나지 않았다. 지소미아 종료 통보 이틀 후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하자 한국 합동참모본부 지소미아를 통해 일본과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했다. 지소미아는 11월까지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 이낙연은 남은 3개월 안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 회복하고 지소미아의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일본이 물러서면 협상 종료 통보도 없던 일로 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소미아가 없어도 양국은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에 따라 미국을 거쳐 군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 김현종

도 이 채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물론 미국은 더 신속하고 포괄적인 지소미아를 선호하지만 말이다.

김현종은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하자면서 일본과 군사적 협력을 거부하는 것에는 근본적인 모순이 있다. 미국은 중국 등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일본을 핵심 파트너로 삼기 때문이다.

책략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통보는 책략인 측면이 크다. 국내적으로는 핵심 친문 인사인 조국이 법무부 장관인 사청문화를 앞두고 딸의 특혜 의혹 등으로 대중의 실망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상황이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한·일 갈등에서 미국의 중재를 이끌어 낸다는 계산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안보 협력을 강조하며 사실상 일본 편을 들어온 미국의 태도는 지소미아 종료 통보 후에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미국 국무부는 “문재인 행정부가 동아시아 안보 위협에 관해 심각하게 잘못 알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11월 안에 한국 정부가 생각을 바꾸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집권 초부터 문재인 정부는 꾸준히 친미 노선을 견지해 왔고 그러면서 한·미·일 동맹 요구에도 타협해 왔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부터 꾸준히 친미 노선을 걸었고, 최근에도 일본과 함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지하고 있다

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는 대중의 분노를 산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최종적 해결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표하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했지만, 새로운 합의를 맺으려 하지는 않는다. 결국 전임 정부들처럼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나기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위안부’ 문제가 한·미·일 동맹에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소미아에 관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행보는 모순과 한계에 부딪히고 결국 미국에 협조하는 것으로 귀결될 공

산이 크다.

과거에 노무현 정부도 “친미적 자주”를 표방하며 균형외교와 한미동맹 사이에서 줄타기 하다 결국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 등 한미 동맹 강화로 나아갔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우리 안보 역량을 강화”한다며 군비 증강을 추구하는 것도 모순을 낳을 것이다. 예컨대 국방부가 도입하려는 차세대 전투기 F-35는 미국이 지정한 일본의 정비장에서 수리해야 하고,

함대공 요격 미사일 SM-3 최신형은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한 것이다.

한국의 군사력 증강은 그 자체로 다른 열강의 군사력 증강과 함께 동아시아 불안정의 한 요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바란다면 제국주의 질서에 협력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소미아의 완전한 파기를 요구하고 호르무즈해협 파병과 군비 증강에 반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문재인, 경사노위 노동계 위원 해임

개약 강요할 경사노위 2기도 반대해야 한다

양효영

조만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의 일부 위원과 의사 결정 구조가 바뀌어 경사노위 2기가 출범한다.

지난달 경사노위는 6인 대표자회의를 구성해 노사정 당연직 5명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해촉을 청와대에 건의했다. 8월 30일 청와대는 이를 수용해 해촉했다.

사실상 여성·비정규직·청년 계층별 노동계 위원들을 해임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여성·비정규직·청년 계층별 위원들을 경사노위에 참여시켜, 기존 노사정위와는 다르다는 것을 표방하고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가를 압박하려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경사노위에 탄력근로제 합의를 주문하고 이것이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통과되자 민주노총의 항의 행동이 이어졌다.

계층별 위원들은 탄력근로제를 다룰 본회의에 두 차례 불참했다. 연이은 불참으로 본회의의 통과가 난항을 겪자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계층별위원을 “보조축”이라며 비난하고 꺾아 내렸다.

이처럼 계층별 위원들이 노동개약

의 틀러리로 움직여 주지 않자 아예 해임한 것이다.

이번 2기 경사노위는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고 본위원회 개최 요건도 낮출 것으로 보인다. 계층별 위원들이 노동개약을 막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노동개약에 반대하는 위원은 아예 손쉽게 해임하려고 한다.

노동자 양보라는 답을 정해 두고 거기에 경사노위 구조를 끼워 맞추는 것이다.

1기 경사노위 파행이 계층별 위원 탓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전형적인 책임 전가다.

경사노위 신뢰 추락과 위기는 문재인 정부의 친기업 반노동 정책에서 비롯했다. 문재인 정부가 탄력근로제 확대, 작업장 점거 금지 등을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려 하면서 경사노위에 대한 불신과 비난이 커졌다.

문성현 위원장은 본회의 합의 없이 의제별위원회 합의만으로도 효력을 가진다며 탄력근로제 확대안을 국회에 넘겼고, 문재인은 이를 두고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추켜세웠다.

정부의 말뿐인 공공부문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후퇴 등에 맞서 노동자들

이 투쟁한 것도 경사노위의 본질을 드러냈다.

경사노위 참가에 반대한 민주노총 좌파들의 공동 대응도 경사노위의 본질을 드러내는 데 일조했다.

한편, 계층별 위원인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민주노총의 무능과 무책임”도 경사노위 실패의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8월 30일 계층별 위원들은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2기에는 참여하라는 성명을 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개약이 쉽게 추진되기 힘들었다. 정부가 자신의 반노동 정책을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2기 경사노위를 구성하려는 것은 여전히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개약을 정당화하려 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보수 경제지들은 “이제는 사회적 대화의 결과물을 내놔야 한다”면서 2기 경사노위에 신속한 개약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사노위 밖에서 민주노총이 개약에 반대하는 투쟁을 강력하게 벌여서 이 시도를 좌절시켜야 한다.

신간 추천

레닌과 21세기

존 몰리뉴 지음 | 20,000원 | 472쪽 | 책갈피

마르크스주의란 무엇인가?

크리스 하먼 지음 | 9,000원 | 168쪽 | 책갈피

9월 정기국회 노동개악 비상

법안 통과 전부터 개악 추진 중, 실질적 저지 위한 투쟁해야

박설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8월 27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 중점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위해 힘쓰기로 했다.

당정청은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산업육성특별법을 비롯해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조했다. 동시에 “민생법안” 처리가 더는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제도 개악, 노동법 개악 등 노동자 등골 빼는 법안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깊어지는 경기 침체에 대응해 친기업 반노동 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만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기도 출범시킬 계획이다. 지난 상반기에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에 반발했던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를 해촉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재구성하겠다는 의미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를 경사노위에 참여시켜 양보를 끌어내려는 구상이 뜻대로 안 되자 그동안 내세워 온 “노동 존중”을 쓰레기통에 처넣은 것이다.

물론, 지금 조국의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관련 기사 4면을 보시오) 선거법 개정을 두고도 갈등이 심하다.

그러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경제 위기로 돈벌이가 어렵다고 아우성인 기업주의 이익을 확고히 지키겠다는 데서 한통속이다. 자유한국당은 한술 더 뜬 개악안들을 내놔다. 최근에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당내에 ‘강성귀족노조 개혁 특별위원회’를 설립하기도 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이권·주도권을 둘러싸고 대립하더라도, 노동

개악 법안은 쉽게 처리될 수 있다. 그동안 치열한 정쟁의 와중에서도 최저임금법이 개악되고 노동시간 단축이 누더기가 돼 온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법 통과 이전부터 추진되고 있는 개악

더구나 문재인 정부는 이미 노동개악을 착착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일 갈등을 빌미로 민족주의를 내세워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 **특별연장근로 허용**: 7월 중순부터 정부는 “수출 규제 품목 국산화”를 지원하겠다고며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다. 사용자 마음대로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함에 따라 기계·화학 등으로 대상 업종을 늘리는 것도 검토 중이다.

△ **재량근로시간제 안내서 발표**: 7월 말 정부는 재량근로제 활용을 적극 권장하는 안내서를 제작·배포했다. 말로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준다고지만, 실제로는 노동시간에 대한 법적 제한 없이 일을 시키고 연장근로 수당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 **안전규제 완화**: 8월 5일 정부는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 규제를 완화했다. 공장안전보고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인증 등 심사에 걸리는 기한을 줄이고 인허가 절차를 단순화해 준 것

이다. 산업 경쟁력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가 노동개악과 각종 규제완화에 시동을 걸자, 기업주와 보수 언론들은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날뛰고 있다. 민주당도 원내수석부대표 이원욱이 주 52시간제 도입을 아예 연기하자는 법안을 발의하기까지 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운동이 최대한 힘을 집중해 노동개악에 맞

서 저항하는 것이다. 그동안 봤듯이, 국회 본회의 일정에 맞춰서 그때 가서 총력 투쟁을 하겠다는 것으로는 개악에 제동을 걸기 어렵다.

민주노총은 11월에 가서 사회대개혁 총파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당면 노동개악에 맞서 지금부터 대정부 투쟁을 단단히 조직해야 한다. 톨게이트 투쟁 등에 연대를 조직하고 곳곳에서 벌어지는 투쟁을 연결시켜 대정부 항의로 확대해야 한다.

현대차지부 집행부의 반일(反日) 경쟁력 협조 약속 유감

최근 현대차지부 집행부가 한일 갈등 상황에서 국내 산업-기업의 경쟁력 회복에 협력하겠다고 무분규 잠정합의를 한 것은 큰 잘못이다. 다음날 집회에 모인 현대차그룹 계열의 부품사 노동자들은 “현대차 지부가 우리를 힘 빠지게 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보수 언론은 조

산업 노동자들에게도 위기에 파업 말고 현대차지부를 따르라고 압박했다.

노동운동은 한일 갈등을 빌미로 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자 투쟁 자체 요구에 협조해선 안 된다. 정부의 한미일 동맹 노선과 함께 노동자 희생 강요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전교조 합법화 이유로 노동법 개악 수용 안 돼

문재인 정부는 ILO협약 비준을 빙자해 하반기 국회에서 노동법을 개악하려 한다. 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인 노동기본권 보장은 미흡하기 짝이 없고, 도리어 사용자 측의 요구인 사업장 점거 금지, 단협기간 연장 등을 포함시켰다.

그런데 전교조의 법외노조 신세를 면하려면 불가피하게 정부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거나 적어도 반

지도자들 사이에서 나온다.

그러나 부문의 이해를 앞세워 전체 노동계급에 해로운 개악을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 전교조의 좌파 활동가들은 “전교조 합법화와 정리해고·파견근로 제도를 맞바꾼 1998년의 경험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옳게 지적한다. 게다가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파업권 약화는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도 제약할 수 있다.

수차례 법원 판결에도 지키지 않는 기업들

불법파견 정규직화! 민간부문 노동자도 투쟁 중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위한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은 민간부문 노동자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지난 7월에 이어 9월 4일 하루 공동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김수익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은 벌써 한 달 넘게 고용노동부 서울 지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노동부가 직접생산 공정에 한해서만

부분적으로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도 식당·청소·경비 등을 제외하는 등 제한적이었는데, 그보다도 인정 범위를 더 좁히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 넘게 외면하다가 이제야 더 후퇴한 계획을 내놓은 셈이다. 노동자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다.

최근 자동차·제조업 사업장에서도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이 잇따랐다. 한국지엠 창원 공장,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 아사히글라스 등이 그런 사례이다. 노동자들이 지난 십수년간 끈질기게 투쟁해 온 성과이다.

그런데 사용자들은 그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적이 없다. 이번에 한국지엠 창원 공장 노동자 105명이 받은 불법파견 판결은 한국지엠에서 8번째 승소이다. 현대차에서도 노동자들이 여러 번

승소했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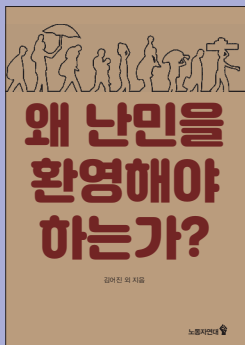
사용자들이 항소에 항소를 거듭하고 법원에 온갖 로비와 압박도 가해,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조차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일부는 배제를 당했다. 더구나 대법원 판결이 나더라도, 같은 공정·업무에서 똑같은 일을 해 온 노동자 모두에게 그 결과를 적용하지 않고 재판 당사자에

게만 적용했다.

정부도 이런 사용자들을 적극 지원하며 노동자들의 고통을 조장하고 방치했다.

따라서 법원 판결을 발판 삼아 노동자들이 최종 승리로 나아가려면 정부와 사용자들의 각개격파 시도에 맞서 투쟁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이 진지하게 연대를 조직해야 한다.

새로 나왔습니다



왜 난민을 환영해야 하는가?

김어진 외 지음 | 노동자연대 | 4,000원

이 소책자를 읽으면서 당신은 난민이 겪는 차별과 천대에 왜 반대해야 하는지를 또렷하고 가슴벅차게 느끼게 될 것이다. 읽고 주변에 권유할 만한, 작지만 큰 울림이 있을 소책자.



혁명적 조직의 목적

최일봉 저작 | 노동자연대 | 2,000원

대다수는 혁명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소수는 혁명이 가능하고 어쩌면 필요하지만, 혁명적 정치조직은 불필요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 소책자는 혁명적 조직의 존재 이유를 살펴본다.

조국 딸 의혹

‘공정’과 ‘정의’보다 계급 불평등이 문제다

김문성

검찰이 8월 27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딸의 입시 특혜 의혹 수사를 명목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박근혜 정권을 수사하며 얻은 국민적 인기를 배경으로 일약 검찰총장이 된 윤석열이 이 수사를 직접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다음 달 자신들의 직속상관이 될 수도 있는(차기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정권 실세를 검찰이 수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조국 후보자의 여러 의혹 때문에 임명 반대 여론이 커지고 대통령 국정 수행 지도도와 민주당 지지율이 확연하게 하락한 시점이었다.

구 여권 적폐 청산에 대한 높은 지지 여론을 바탕으로 검찰 수사를 앞세워 인기와 지지를 유지해 온 정권에서 검찰이 정권 실세의 부정 의혹을 수사하고 나선 것은 시사적이다.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입기 후한 권력기관 단속은 쉽지 않게 됐다.

실사 검찰이 조국에게 면죄부를 주더라도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정권이 검찰에 의존하는 것으로는 정치적 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게 박근혜 정부의 사례에서 드러났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한·일 갈등으로 불거진 대미 관계 균열, 수출 경제 위협 증대, 불안정 고조 등의 문제로 위기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라 있다. 노동계급의 불안(배신감)도 나타나고 있다. 지배계급이 박근혜를 버리고 문재

인 정부를 지지한 것은 사회적 대화 방식을 통한 정치적 안정 속에서 복합적 위기에서 지배계급을 지켜줄 조처들을 추진해 주길 바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기 관리에 무능하다면 지배계급도 이 정부를 존중할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간 권력투쟁도 더 첨예해지고 있다.

그래서 검찰 통제력을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문제인이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 그동안에도 민주당은 우파 야당의 거센 반대를 오히려 조국을 반드시 장관에 임명해야 할 이유로 삼아 왔다. 조국이 이 정부의 ‘개혁’ 이데올로기를 상징하는 인물처럼 처신해 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여야 간 권력 투쟁은 더 격렬해질 듯하다. 진보 개혁적 노동계급의 지지를 잃기 시작한 문재인 정부에게는 어려운 싸움이다. 검찰조차 조국의 통제를 안 따르겠다고 한 마당이니 말이다. 이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이 조국 인사청문회를 더 미루려는 것은 나날이 반대 여론이 커지는 조국 임명 문제로 문제인의 정치적 부담을 키우려는 책략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8월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의당과 진보진영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고약하게도 위기를 때만 조그만 개혁 요구에 호응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들이 지금 싸우는 게 나쁘지 않다는 뜻이다.



“그들만의 리그” 드러나다 말로는 촛불 계승, 특권 물려주는 데는 구 적폐 세력과 마찬가지

여/야 진영논리가 아니라 계급 관점의 접근이어야

일각에서는 조국이 검찰 수사나 청문회로 위법 혐의를 벗으면, 오히려 전 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조국 의혹 사태의 본질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조국에 대한 서민층의 경악과 분노는 촛불 운동을 계승하겠다고 한 정권의 실세가 실제로는 재산을 불리고 물려주는 과정에서 구 적폐 세력과 전혀 다를 바 없이 행동했기 때문이다. 계급 불평등 현실과 위선이 지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특히 자녀 세대에게 경제·사회적 지위(학벌, 경력, 직입, 재산)를 물려주려고 벌인 일들은 이 사회 “그들만의 리그”의 실체를 지나라하게 드러냈다.

조국은 진보적 가치와 양심을 부르짚던 ‘강남 좌파’(진보적 ‘연행’을 하는 특권층을 비유하는 말)로 불려 왔는데, ‘좌파’가 아니라 ‘강남’에 존재의 본질이 있었던 것이다.

조국 후보자 일가가 자신들이 소유·경영한 사학재단 운동화원회 재산

분쟁을 벌인 일, 알고 보니 일가친척만 의 문물이었던 사모펀드 등은 (드러난 것만 놓고 봤을 때) 세금 등의 손실을 최대한 줄이면서 사유 재산을 불리고 상속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여느 지배자들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

사모펀드 투자 시점은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였다. 따라서 권력을 통해 얻은 정보나 자원이 투자 과정에서 사용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은 합리적이다.

조국 딸의 논문 의혹은 상류층 학생들(“특목고”)에 다닌 조국의 딸이 고교생 신분으로 단국대 의과대학의 연구 논문 프로그램에 입선으로 참여한 것은 재학생 부모들의 “학부형 입원심 프로그램” 덕분이었다.

의사, 변호사, 교수 등 대표적인 상류층(상층 중간계급까지 포함된) 전문직 부모들이 서로의 자녀를 인턴으로 받아 가며 품앗이 지원을 한 것이다. 문제의 단국대 의대 교수의 자녀도 조국 딸과 고교 동기였다. 여기에 제1저자 등 재라는 혜택까지 입은 것이다. 이런 도움을 받아 외국어계열 특목고 학생은 명문대 자연계 학부를 거쳐 현재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한 것이다.

“개천의 봉어”

노동자·서민층 사람들은 대학 입학을 위해 이런 종류의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 아마 대다수는 그런 게 있는지도조차 몰랐을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 등에서는 여전히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말이다.

동사무소 말단 공무원 업무, 공장 제조라인, 건물 경비, 마트 캐셔 일을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명문대 지원 자기 소개서에 넣는다고 생각해 보라. 이 체험

을 나열하고서 “고교 시절부터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과 실습 경험을 갖춘 인재”를 놓치는 것은 … [미래의 인재론] 놓치는 것”(알려진 조국 딸 자기소개서에서 인용)이라고 당당하게 쓸 수 있을까?

사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상상해 봐도 별 도움이 안 될 터데, 일단 그런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경쟁에서 차별성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성공한 전문직과 달리 노동자 직업 체계를 하려면 부모가 아니라 사용자의 허가부터 받아야 한다.

친문 인사들의 뻔뻔한 옹호와 달리, 이런 과정들이 ‘합법’이라고 해도 분노를 감가지기커녕 오히려 그 반대일 작했다. 계급 간 불평등 현실에서 수혜를 입는 계급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양당 간 차이를 못 느끼겠다는 것이다. 조국의 의혹이 상징적인 이유다.

자한당 같은 뻔뻔한 우파가 민주당

의 위선을 이용해 기층의 정당한 불만을 가로채고 이를 반우파 정서와 지령을 깨는 도구로 쓰기 전에, 노동운동은 훨씬 더러난 계급 불평등 현실을 비판하고 정당한 분노를 대변해야 한다. 당면한 노동계약에 맞서는 투쟁과 연결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다. 당연히 조국을 옹호하면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어려석게도 조국 딸을 공개 응원한 것도 동류 의식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조국 본인이 부와 권력보다 진보적 가치와 양심을 더 중시하라고 설파해 온 온건한 ‘진보 지식인’ 출신이라는 것이다. 개혁 촛불 정부를 표방해 놓고는 실제로는 박근혜 적폐를 실천하는 문재인 정부의 위선과 똑 닮았다. 이러니 조국의 위선은 청년 세대에게 배신감과 분노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그동안 ‘우리를 지지하지 않으면 자한당이 돌아온다’고 사람들을 겁주며 지지층 결속을 유지해 왔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민주당에게 ‘너희가 자한당과 다른 게 뭐냐고 묻기 시작했다. 계급 간 불평등 현실에서 수혜를 입는 계급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양당 간 차이를 못 느끼겠다는 것이다. 조국의 의혹이 상징적인 이유다.

자한당 같은 뻔뻔한 우파가 민주당의 위선을 이용해 기층의 정당한 불만을 가로채고 이를 반우파 정서와 지령을 깨는 도구로 쓰기 전에, 노동운동은 훨씬 더러난 계급 불평등 현실을 비판하고 정당한 분노를 대변해야 한다. 당면한 노동계약에 맞서는 투쟁과 연결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다. 당연히 조국을 옹호하면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오물 덩어리 간판을 바꿔 달아도 폭압기구로서의 국정원 본질은 바뀐 적이 없다

국정원, 또 공안 사건 조작 시도 사찰과 밀정 짓은 자본주의 보안경찰의 본성이다

김지윤

문재인 정부 하에서 국가정보원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 폭로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4년부터 5년 동안 정보원에게 매월 수백만 원씩, 1억여 원을 지급하며 민간인 수십 명을 사찰했다. 사찰 대상은 과거 김 씨와 같은 학생 운동 조직에 있었던 사람들로 현재 민주노동당 간부, 진보 정당 간부, 지역 사회단체 활동가, 변호사, 노무사 등이라고 한다. 김 씨를 매수한 팀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등을

국속한 ‘RO 사건’을 담당한 곳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에는 ‘RO 전당을 일망타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국정원은 서울대 단과대 학생회장으로 한홍련 대의원 출신인 김 씨가 경제

적 어려움을 겪자 그를 매수해 ‘프락치’ 활동을 시켰다. 국정원은 매달 200만 원을 기본급으로 지급하고, 진술을 하면 50만 원, 진보 단체에서 간부로 승격하거나 핵심 자료를 제출하면 최대 300만 원씩 성과급을 줬다.

국정원은 녹음과 동영상 촬영 등을 지시했고 활동가와 함께 살 집을 얻어 주고 카메라를 설치해 동태를 파악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RO 사건” 정보자에게 준 10억여 원과 유사한 금액을 줄 수 있다

고 그를 회유했고, 녹음 장비를 건넬 때도 “RO 사건”에서 사용한 제품이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고 한다. 김 씨는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바뀌어도 활동 내용에서는 차이가 없

다고 증언했다. 문재인 정부가 말한 국정원 개혁이 얼마나 속 빈 강정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 준다.

국정원이 이명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부패 비리의 몸통 일부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정원을 향한 대중의 분노와 불신은 크게 높아졌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대선 개입, 세월호 여론 조작 시도, 비리 자금 전달 등에 국정원을 이용했다.

문재인은 국정원 개혁이라며 요란하게 국내 정보 수집 부서를 폐지했지만 ‘공안’ 관련 직무는 유지했다. 국내 정보 수집과 사찰의 근거는 그대로 둔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보안을 이유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이번

“정권 바뀌어도 상관없다”고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 괜한 말이 아니었던 것이다.

“정권 바뀌어도 상관없다”

실제로 김대중은 안기부의 명칭을 국가정보원으로 바꾸면서 개혁을 약속했지만 당시 지하철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의원을, 김대중의 측근들까지 1800여 명을 도청했다. 노무현 정부 하에서는 송두율 교수를 간첩으로 몰았다. 당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이 건국 이후 최고위급 거물 간첩 운운하며 날뛰었다.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이 폭로되며 그 부산물로 전임 노무현 정부의 노동자 투쟁 저항 사찰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민주당 지도부였던 문재인은 노무현 정부가 한 것은 이명

박과 달리 경찰을 통한 합법 사찰이라는 식으로 변명했다.

정권이 바뀌어도 국정원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것은 그 기구가 체제 수호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 국가 기구이기 때문이다. 특히, 선출되지 않은 수사·정보 기관들이 자본과 체제를 지키는 일을 직접적인 자기 임무로 삼는다. 여기에는 노동계급의 저항으로부터 자본을 보호하는 일도 포함된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이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폭압 기구다. 선진 민주주의 나라들에도 비슷한 기관과 업무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경우에는 자국의 제국주의적 이익을 위해 활동무대가 더 넓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들 기관들은 어떤 형태로든 체제에 도전하는 세력과 운동에 대해서 감시하고 탄압하는 구실을 한다. 이런 활동들을 뒷받침해 주는 국가보안법은 비슷한 목적의 다른 수단이다. 현재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국정원만 개혁하는 안이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다.

민중당과 정의당은 이번 사찰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정당하게 요구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국정원이 근래에 몸을 낮춰 개혁 시늉이라도 했던 것은 박근혜 퇴진 운동 여파 덕분이었다. 계급 세력 균형이 중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민주주의 문제에서도 전혀 일관되지 않고 오히려 퇴보적임이 드러났다. 노동운동은 문재인 정부에 정치적으로 독립해 그에 맞서 싸워야 한다.

<노동자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학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변화·미세먼지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권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추자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진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면 새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국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있어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불과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산전선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변화, 미세먼지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한다. 대의 민족을 단결시켜야 하고, 해를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공동전선이라는 수단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점검하고,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성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위해서 섬멸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긍되면 우리와 함께 한다.

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정경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 자결에 반대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모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자기결정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탄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를 반대한다. 우리는 모든 난민을 억류 상태에서 풀려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에서 살 권리를 위해 투쟁한다. 특히, 우리는 거기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탄압과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탄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이 법은 ‘북한’의 위협과는 큰 관계가 없고 오히려 남한 내 정치적 반대를 잠재우기 위한 마녀사냥으로 권력층이 종종 사용하는 무기이다.

각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에 있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투쟁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체제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를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혁명적 조직은 노동조합 운동으로부터 생겨나 세워질 수 없고, 오히려 자본주의에 혁명적으로 반대하는 소수(노동자뿐 아니라 청년·학생도 포함됨)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공동전선이라는 수단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점검하고,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성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위해서 섬멸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긍되면 우리와 함께 한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기금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이름 _____

휴대전화번호 _____

이메일 _____

주소 (시군구소재) _____

소속 (☐ 직장) ☐ 노조 ☐ 대학교 ☐ 종교단체 ☐ 기타) _____

회비/정액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5만 원 □ 기타 (_____) 원 (비기 100%은 월 200 원 이상 (단 대학원은 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만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서명)

※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를 찍어 010-4080-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 보내 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02-2271-2395 /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

성평등 수업을 경찰 수사로 넘긴 광주시교육청 규탄한다

경찰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 중단하라

배이상헌 교사를 방어하자

정진희 <노동자 연대> 여성 담당 기자,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조합원

지난 7월 24일 광주시교육청이 중학교 도덕교사의 성평등 수업을 성범죄(성 비위) 취급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그 수업을 한 배이상헌 교사를 직위 해제했다. 수업에 사용된 영화를 본 학생의 일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교육청에 신고했다는 게 이유였다. 교사가 수업 시간에 '부적절한 말'을 했다는 일부 학생의 주관적 진술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의 성인식 개선팀과 장휘국 교육감이 이 사안을 성범죄 취급한 것은 완전히 부당하고 독단적인 것이었다. 민원이나 신고의 내용은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했다거나 성적인 요구를 했다는 게 전혀 아니었다. 그저 수업 내용(특히 영상)에 대한 불만을 몇몇 학생들과 학부모가 제기한 것이었을 뿐이다.

이 수업은 성범죄이기는커녕 외려 성평등 수업이었다. 배이상헌 교사는 성평등과 학생 인권 관련 교육을 오랫동안 해 온 전교조 교사이다. 광주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을 후원해 왔고, 광주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배이상헌 교사가 수업 시간에 틈 단편영화 <억압받는 다수>는 프랑스의 여성 감독 엘레오노르 푸리아가 연출한 것으로, 성 역할을 뒤바꾸 여성 차별의 현실을 고발한다. 광주시교육청이 그 영상을 '선정적'이라고 비난했다지만, 국내의 많은 여성단체들은 이 영



배이상헌 교사와 그 지지자들이 광주시교육청의 독단적 관료 행정에 항의하고 있다

화를 성평등 교육 자료로 추천했다.

일부 학생은 영화가 취한 폭로 방식(예컨대, 남성이 여성들에게 성추행당하는 장면)에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곧 성희롱일 순 없다. 일각에서는 그 영상이 중학생의 발달 단계에 안 맞는 교재라며 교육청 조치를 옹호하지만, 이 문제는 교사들과 토론하고 학생들과도 대화하며 개선해 나아가 갈 문제이지, '성 비위'로 몰아 경찰 수사의 제물로 바칠 일이 아니다. 공권력이 개입하는 순간 바람직한 교육 방식

과 교재를 둘러싼 토론은 원천 차단당한다.

차단

광주시교육청은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배이상헌 교사에게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 혐의 내용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장휘국 교육감은 전교조 교사 출신 3선의 '진보' 교육감으로, 배이상헌 교사의 평상시 입장과 실천을 잘 아는데도 이렇게 처리했다. 배이상헌 교사는 장휘국 교육감의 학교비정규

직 노동자 대량해고 등 진보 교육감답지 않은 행보에 비판적 문제제기를 해왔는데, 이 때문에 미운털 박힌 것 아니냐는 관측이 교사와 교육운동가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배이상헌 교사와 그 지지자들이 광주시교육청의 독단적 사건 처리에 항의해 온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그러나 장휘국 교육감은 끝내 경찰 수사 의뢰를 철회하지 않았다. 8월 20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배이상헌 교사를 '아동 학대' 등을 다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로 입건했고, 조만간 그를 소환조사를 예정이다.

경찰은 이 영화 상영이 학생들에게 미친 영향을 조사한다고 한다. 성범죄가 아닌, 수업 내용에 관한 학생들의 반응을 경찰이 조사해서 성범죄 여부를 판정한다니 어처구니없다. 관람자의 일부가 그 영상을 보고 불쾌감을 느끼면 그것이 곧 성범죄이고 학대라는 말인가?

학생들이 강제로 영화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는지 여부도 조사한다는데, 이 역시 황당하다. 학교 수업에서 상영한 영화의 시청 강제성을 어떻게 조사하겠다는 것인가? 교사가 영화를 틀 때 학생들에게 사전 동의를 다 받지 않았다면 시청 강요라고 할 셈인가?

경찰은 이 영화를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에 넘겨 전문가의 자문을 받겠다고 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 같은 검열 기구가 성차별 반대 감독이 만든 영화의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게 해서 배이상헌 교사의 성범죄 여부를 입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추행이나 위계 관계를 이용한 성적 강요 같은 성범죄와, 교사의 수업 내용은 명백히 다르다. 언론에 보도된 경찰 수사 방향은 이 단순한 진실을 가리고 있다.

성범죄와 무관한 교사의 수업 내용을 경찰이 조사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일이고 탄압이다. 경찰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광주시교육청은 국가의 억압기구인 경찰의 힘을 빌려 자의적인 관료 행정을 정당화하지 말고 해당 교사의 직위 해제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

광주시교육청과 경찰 수사에 동조하는 일부 여성단체들 유감

유감스럽게도 일부 여성단체들, 특히 광주 지역의 주요 여성단체들이 광주시교육청을 편들며 경찰 수사를 사실상 지지하고 있다.

8월 13일 광주여성민우회는 배이상헌 교사의 정당한 자기 방어 활동(공개 수업)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천여성회, 인천페미액션, 인천여성회도 이에 동조하는 성명을 냈다.

8월 19일에는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이 배이상헌 교사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현 상황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지만, 성명의 압도적 내용은 배이상헌 교사의 활동 비판에 맞춰져 있고, 광주시교육청의 조치와 경찰 수사를 사실상 지지하고 있다.

이 성명들은 약간의 어조 차이는 있어도, 모두 배이상헌 교사의 자기 방어 활동이 피해자의 목소리를 위축시킨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애먼 교사를 성범죄자로 모는 사용자(교육청)와 국가(경찰)의 탄압을 옹호하는 것이야말로 스크리미투의 정당한 취지를 퇴색시키고, 진보적 대중 속에서 환멸을 낳기 십상이다.

이 여성단체들은 젠더권력과 학생-교사 위계 관계를 얘기한다. 8월 19일 광주전남여연은 "교사와 학생 간 권력 차이 인정"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은 남성 교사 노동자의 수업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국가 권력 편에서 노동자 탄압을 두둔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개악을 노골화하고 친기업적 정책을 시행하며 빈곤과 불평등을 확대하고 있지만, 개량주의적 여성단체들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국가기관의 후원을 받아 여러 행사를 치르고 있다. 정부 위원회, 지자체, 지역교육청 등 국가기관의 각종 정책 입안과 실행에 개량주의적 여성단체 소속의 주요 간부들이 들어가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광주시교육청과 협력해 오거나, 그와 유사한 협력을 지역 교육청과 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이 배이상헌 교사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들 여성단체들의 물질적 이해관계가 근저에 놓여 있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내세우는 것은 이런 이해관계를 가리는 겉포장일 뿐이다.

배이상헌 교사를 방어하자

배이상헌 교사는 광주시교육청에 항의하는 활동을 한 달 넘게 하고 있다. 전국도덕교사모임, 전교조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참교육학부모회 등이 광주시교육청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광주교육청 앞 항의 시위 등을 해 왔다.

광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배이상헌 교사를 지지하는 교사와 진보계 활동가 등이 참가하는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의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불행히도 전교조 본부와 전교조 여성위는 (아직) 배이상헌 교사 방어에 나서지 않고 있다. 최근 전교조 중집에서 배이상헌 교사 방어 입장을 내자는 안건이 제출됐지만, 애석하게도 통과되지 못했다.

광주시교육청과 일부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배이상헌 교사 방어 활동을 '2차가해'라고 비난하고 있다. '2차피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비



한 달 넘게 싸우고 있는 배이상헌 교사

난해도 고압적이긴 마찬가지다.

배이상헌 교사 방어는 단지 우연적이고 일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운동이 회피해서는 안 될 계급적 단결 문제이다. 사용자들의 공세가 거세지고 경찰 등 국가기구의 억압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광주시교육청의 권위주의적 조치에 침묵한다면 노동자들은 위축되고 사상적

으로 혼란을 겪게 된다.

계급적 단결

장휘국이 진보 교육감이라는 말이 맞다고 해도 엄연히 그는 사용자이고 배이상헌 교사는 노동자이다. 계급을 가로지르고 남성 전체와 남자 교사 전체를 잠재적 가해자 취급하는 급진 페미니즘의 분열주의와 개량주의에 위축되지 말아야 한다.

경찰의 배이상헌 수사는 스크리미투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정당한 취지를 훼손하는 수구적 조치일 뿐이다. 경찰은 노동계급과 일반 여성의 친구가 아니다. 버닝썬 사태에서 보았듯이, 지독히 부패한 자본주의 사회구조와 그 수혜자들을 지켜 주는 부패한 폭력 기구다.

배이상헌 교사의 정당한 투쟁에 지지를 나타내자. 배이상헌 교사와 그 지지자들은 8월 31일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전국의 전교조 교사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안정적인 생활과 안전한 일터를 위한 지극히 정당한 요구

토목건축 노동자 파업 예고

산재 사망 늘리는 저임금·고강도 노동 현실에 맞선다

장우성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 조합원 1만 5000여 명이 9월 2일 하루 일손을 놓고 서울로 집결한다.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는 일당 1만 원 인상, 주휴수당 지급받는 일요휴무 등이다.

토목건축분과에 소속된 목수·철근공·콘크리트타설공·비계공 등 건설 현장의 일용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지역별 현장별로 제각각인 노동조건을 강요받았다.

2017년부터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냈다. 이로 인해 최근 몇 년 동안 노동조합의 문을 두드리는 노동자가 늘면서 조직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이 때문에 사용자들은 올해는 ‘호락호락하게 노동조합에 양보하지 않겠다’고 버르고 있다.

사용자들은 ‘건설 경기가 좋지 않다’며 임금 동결을 고수하다가 최근 교섭에서는 ‘최저임금 상승률’ 수준으로만 인상할 수 있다고 했다. 주휴수당 지급은 단호하게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도 한몫하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억누르고, 탄력근로제 확대

를 시도하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것이 사용자들의 기를 살리고 있는 것이다.

2011년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건설일용근로자 포괄임금 업무처리 지침’은 건설 현장에서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근거가 돼, 건설 사용자들은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됐다.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는 이 지침의 ‘연내 폐기’를 약속했지만,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저임금

임금 인상 요구가 과도하다는 사용자들의 주장과 달리 건설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8월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보면, 건설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총액(294만 원)은 제조업(약 370만 원)의 80퍼센트에도 못 미친다. 더구나 건설 노동자들은 임금을 쪼개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

최근 건설 경기 후퇴로 ‘일하지 못하는 날’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일당 1만 원 인상으로도 줄어드는 소득을 만회할 수 있을지 장담키 어렵다는 것이 건설 노동자들의 우려다. 그런 점에서 주휴수당 지급도 중요한 요구다.

충분한 휴식이 없는 고강도 노동은 노동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지난해 산재로 인한 사망자의 절반이 건설 노동자라

는 사실이 이런 현실을 반영한다.

또, 한국건설기술원의 연구에 따르면 주 52시간을 적용해 건설 공사장에서 월 휴일을 4일 늘리면 현행 12개월 기한의 공사가 15.2개월로 3개월가량 늘어난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임금이 늘어날 뿐 아니라 건설 현장의 안전과 일자리도 개선할 수 있다.

토목건축 노동자들의 투쟁은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등을 둘러싸고 전체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벌어지고 있는 투쟁과 마찬가지로 경제 위기의 대가를 누가 짊어져야 하는지를 둘러싼 투쟁이다.

사용자와 정부가 완강한 태도를 보이지만, 노동자들이 최근 조직과 자신감이 성장한 것을 바탕으로 이윤에 타격을 주는 투쟁에 나선다면 양보를 강제할 수 있다. 토목건축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용어설명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시 하루 일당에 연장·휴일·주휴·연차수당 등을 포함하는 임금제다. 야간이나 휴일에 몇 시간 일했는지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초과 수당이 이미 일당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초과 노동을 많이 시킬수록 이득이다. 포괄임금제는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돼 왔다.

건설 현장 이주노동자에게도 연대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

경제 위기가 심화되며 건설 현장 일자리가 줄어들 우려가 커지자 건설노조는 ‘건설노동자 고용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그런데 이 요구 중에는 ‘내국인 고용 대책’ 같이 결과적으로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로 이어지는 요구가 포함되고는 했다.

최근에도 지역에서 벌어지는 투쟁에서 ‘외국 인력 불법 고용 근절’, ‘내국인 고용 대책 마련’과 같은 요구가 심심치않게 등장하고 있다.

사용자들이 이주노동자를 싼값에 더욱 가혹하게 착취하면서, 전체 건설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하향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지적

은 옳다. 그런데 이것이 이주노동자 탓은 아니다.

사용자들은 건설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해 해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주노동자에게 더 열악한 조건을 강요해, 전체적인 노동조건을 낮추고 이를 이용해 노동자들을 분열시킨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전체 건설 공사의 40퍼센트가 공공부문의 것으로, 정부는 가장 큰 발주기관이다.

따라서 정부가 노동강도 완화, 노동시간 단축을 강제하면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런 문제에는 진지한 관심을 조금도 기울이지 않는다.

경기 후퇴가 지속될수록 사용자들은 이윤을 만회하고자 이주노동자들을 착취하는데 더 많이 의존하려 한다. 사용자들이 건설 현장 외국 인력 쿼터를 요구하고 정부도 이에 호응하는 이유다.

이런 때 노동조합과 건설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조건 강요에 반대하고 나선다면, 단결이 강화돼 사용자들의 공세에 더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다. 임금과 노동조건 하향 압박도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주민 건강보험제도 개악

체류권 볼모로 비싼 보험료 뜯어내겠다고?

임준형

정부가 이주민 건강보험제도를 개악해 여러 이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7월 16일부터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올렸다. 보험료를 4회 이상 체납하면 체류를 불허하기로 했다.

이전에도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하려는 이주민은 내국인과 달리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전년도 평균 보험료 이상을 내야 했다. 올해 그 금액은 11만 3050원이다. 가입 자격이 있어도 금액이 부담돼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이주민들이 많았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2017년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가진 외국인 149만 명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59.4퍼센트로 내국인의 절반 수준이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이주노동자들도 직장건강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지만 가입률은 70퍼센트 수준이다(2015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들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편입시키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개악은 이주민들에게 체류 자격을 빼앗겠다고 위협하며 강제로 비싼 보험료를 뜯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던 이주민의 범위도 축소됐다.

또한 원칙적으로 이주민 1인을 한 세대로 보고 예외적으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세대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개악했다. 고령의 부모, 성년이지만 대학에 다니거나 장애가 있는 등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려운 가족 구성원에게 모두 별도로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동포나 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 허가 난민 등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라 하더라도 가족 관계를 증명하기 어렵거나 필요한 서류 발급에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드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개악 이후 가족 단위로 체류하는 이주민들에게 모두 합쳐 30~40만 원이 넘는 고지서가 날아들고 있다.

도덕적 해이?

정부는 이주민의 “도덕적 해이는 방지하고 내·외국인 간 형평성은 높인다”며 개악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내국인도 지역가입자의 경우 적자다. 게다가 외국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합하면, 2015년 2488억 원, 2016년 2093억 원, 2017년 2490억 원 흑자였다.

또 정부는 이주민들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수급”을 한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미등록 체류자 등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일부 이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타인의 건강보험증으로 치료받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비인도적이다.

정작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하지만 내지 않고 있다. 2019년 7월 현재 미지급 금액이 24조 원에 이른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보다도 덜 지원하고 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다. 정부가 사용하지 않아 남은 세금이 지난 2년 동안 해마다 10조 원이 넘었다.

한편, 최근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공단에 재무 여건이 부진하다며 경영효율화(구조조정, 성과급 삭감) 등 강도 높은 ‘재무건전성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이주민 건강보험료 인상과 건강보험공단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공격으로 재정을 메우려 한다. 넓게 보면, 복지 부족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이주민에게 돌리려는 것이다.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말고 정부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진정으로 복지를 강화하고 노동조건 공격에 맞설 수 있다.

8월 26일 청와대 앞에서는 ‘이주민 건강보험 차별 폐지를 위한 공동행동’ 주최로 이번 개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평일 낮에 열렸는데도 일부 중국 동포와 고려인들이 멀리서 와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건강보험제도에서 이주민에 대한 모든 차별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미등록 체류자를 포함해 모든 이주민들이 저렴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보장돼야 한다.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 1500명 전원 직접고용 하라

8월 29일 오전 10시 대법원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 줬다. 도로공사가 불법파견을 했고 노동자들은 도로공사 직원임을 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그간 노동자들이 도로공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했고 “상호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를 통해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시했다.

노동자들이 그간 도로공사의 업무를 해 왔다는 명백한 사실을 법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다. 무려 7년의 간절한 기다림 끝에 나온 판결이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이 60일 넘게 청와대 앞에서 호소하는데도 묵묵부답이었다. 민주일반연맹의 지적처럼 “노동부는 정말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도로공사 측과 한통속이었던 것이다.

애초에 정부의 잘못된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은 도로공사 측이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 책임을 지지 않고, 자회사 전환 꿈을 부릴 수 있게 만들어 줬다. 국토부, 기재부, 노동부는 이런 꿈을 자회사 설립을 신속히 허가해 줬다. 이번 판결을 봐도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이 얼마나 형편 없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



대법원 승소를 기회 삼아 전원 직접고용 쟁취하자

이번 판결 대상자인 한 노동자는 “수능 전날”처럼 떨려서 전날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판결이 나오자마자 노동자들은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눈물을 흘렸다. 여기저기서 “나 이겼어” 하며 전화 통화로 기쁜 소식을 전하기 바빴다.

마침 엑수 같은 장대비가 몰아쳤는데도 노동자들은 “우리의 눈물이다”, “축하의 샴페인이다”라며 즐거워했다.

7월 1일 자로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1500명이 대량 해고된 후, 노동자들은 청와대 앞과 서울 톨게이트 지붕 위에서 노숙 농성을 했다. 대부분 여성이고

장애가 있는 상황에서 폭염과 폭우를 온몸으로 견디며 두 달 가까이 투쟁해 왔다.

노동자들의 투쟁은 광범한 지지를 받았다. 농성장에는 후원금, 물품, 지지방문 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도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투쟁하며 사회적으로 쟁점화한 효과였을 것이다.

그간 도로공사는 1, 2심에서 불법파견 판정이 났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봐야 한다며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노동자들에게 자회사 수용을 강요했다. 도로공사가 직접고용을 거부하는 동안

사측의 압박과 회유 때문에 자회사로 가거나 퇴직한 노동자도 적잖다.

대법원 판결 이후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 직원으로 의제되거나 한국도로공사에 채용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정한 것을 보면, 소송 당사자들에 대해서만 직접 고용할 심산인 것이다.

사실 이런 입장은 그간 도로공사가 고수해 온 입장을 고스란히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 도로공사는 자회사를 거부해 해고된 1500명 중 대법원 판결

대상자 300여 명만 직접고용 하고 그조차 수납업무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해고된 1500명은 모두 똑같은 조건에서 도로공사 업무를 수행해 왔다. 300여 명이 아니라 해고자 전원이 직접고용 돼야 한다.

노동자들은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1500명 전부 직접고용 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청와대 앞 집회에서 구경숙 인천일반노조 지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도로공사가 300명 외에 나머지도 전부 직접고용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투쟁으로 법원 판결을 앞당겼듯이 전면적인 투쟁으로 1500명 직접고용을 쟁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맞다.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여부는 대법원 판결이 보장해 주지 않는다. 대법원 승소를 기회로 삼아 노동자들이 투쟁을 지속하고 확대해 갈 때 정부와 도로공사를 압박해 전원 직접고용을 쟁취할 가능성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들은 “추석 명절 전까지 직접고용 하라”며 청와대 앞 농성을 계속한다.

8월 31일 톨게이트 직접고용을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비롯해 이어질 투쟁에 많은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양효영

“민영화·외주화 정책이 고 김용균 사망 사고의 진짜 원인”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 하라

지난 8월 19일 ‘고(故) 김용균 사망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역대 정부들이 추진한 발전 민영화·외주화 정책이 김용균 씨 사망의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발전 설비의 정비 및 운전 시장에 진입한 민간업체들은 미숙련 상태의 청년 노동자를 대거 고용하여 임금 비용을 낮추고 이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렸다. 뿐만 아니라 안전을 무시한 운영으로 노동자들을 위험에 노출시켰다.”

김용균 씨 사고 전부터 노동자들은 컨베이어 설비 개선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김용균 씨 “사고 발생(2018년 12월 11일) 전까지 개선되지 않았다.” 하청업체도 “내 설비 아냐”라며 수수방관했다. 노동자들의 요구대로 진작에 설비가 개선됐다면 김용균 씨는 죽음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특조위가 석탄화력발전소의 산업재해와 건강실태를 심층 조사한 결과, 발전소 산재율이 “발전산업 구조개편

[발전소 분할과 민영화·외주화] 시기에 급격히 증가”했고 “사고 및 중독에 따른 의료 이용률은 16년간 꾸준히 증가”했으며, 하청업체의 사고 및 중독 위험은 발전사의 5~6배를 넘었다.

특히 민간 개방 경쟁입찰이 본격화한 2013년 이후 발전 5사의 5년간(2014~2018년) 사고재해자 수는 무려 371명인데,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집중(93퍼센트)됐고 사망자 21명은 모두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뿐만 아니라 각종 발암물질이 날리는 데도 작업 환경이 제대로 측정되지 않았고,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보호장비도 지급되지 않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목숨에서도 차별을 받았다. 발전사 내부 평가에서 사고 사망자 발생 시 감점 계수가 폭로됐는데 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하면 12점인 반면 비정규직 사망은 4점이 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리 한 사람의 목숨은 정규직의 3분의 1이라는 거냐?”며 울분을 토했다.

발전사들은 최저낙찰제를 통해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으로 몰아넣었다. 1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은 발전사 정규직의 50~60퍼센트대였고,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31퍼센트에 불과했다. 하청업체들은 지급 받은 노무비 중 47~61퍼센트만 노동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청업체들은 노무비를 착복하여 수익을 쌓아 올렸다.

나 몰라라 하는 문재인 정부

또한 인건비 절감은 인력 부족으로 이어져, “노동자들은 위험 업무를 홀로 수행하거나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그래서 특조위는 “구조적인 저임금은 노동자가 위험에 노출되어도 자신의 안전보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강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낸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특조위 결과는 민영화·외

주화를 되돌리지 않으면 노동자의 안전과 조건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 줬다. 특조위는 권고안 22개를 발표했는데, 민영화·외주화를 철회하고 운전 부문은 발전사 직접고용, 정비 부문은 정비 공기기업인 한전 KPS로 직접고용을 제시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아직까지 발전사 직접고용은커녕 한전KPS 직접고용에 대해서조차 부정적이다. 많은 발전 비정규직은 발전사 직접고용을 원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게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된 석탄발전 부문의 민간 개방 정책도 고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에너지 재벌의 석탄화력은 고스란히 재허용해 주었다. 2022년까지 신규 석탄화력 6기가 민간발전(포스코, SK, GS 등)으로 건설된다. 환경 오염 때문에 공기기업의 석탄발전은 줄여 나간다고 하면서, 민간에게 신규 석탄발전을 허

용하는 것은 완전한 위선이다. 게다가 정부는 폐쇄되는 발전소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말이 없다.

최근 민주당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산업 육성 특별위원회’ 위원식 위원장은 특조위 위원들을 만나 사실상 특조위 권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국무총리 이낙연은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말만 했을 뿐 권고안 수용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투쟁을 강화해 정부가 수용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정부·여당이 특조위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기존 당정 대책이라도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일각의 제기는 투쟁 발전에 이로울 리 없다.

특조위 결과 발표 이후 기층에서 직접고용 정규직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노동자들이 투쟁을 확대해 가고 지지와 연대를 넓혀 가야 한다.

신정환